

데스크 시국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최근 울산의 12경(景) 중 하나인 대왕암 공원에 색다른 볼거리가 들어섰다. 지난 1월 옛 방어진흥학교에 동지를 튼 울산시립미술관 분관이다. 추억 속으로 사라진 시골 폐교이기에 그 남루한 외관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하지만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우선 전시장에서 바라보는 대왕암 공원의 앞바다가 빼어난 풍광을 뽐낸다. 하늘 높이 솟은 빼곡한 소나무와 분관 건물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 역시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다.

도시 브랜드가 된 미술관 컬렉션

그렇다고 그림 같은 '오션뷰'만이 미술관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소장품전: 찬란한 날들'에 출품된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거북' (Turtle, 150×600×1000cm)이다. 텔레비전 모니터 166대를 거북 모양으로 설치한 이 영상 작품은 백남준이 1993년 동양 정신과 서양 기술의 결합을 예술 미학으로 담아낸 걸작이다. '거북'이 대왕암 앞바다에 동지를 틀게 된 건 울산시의 끈질긴 '구애' 덕분이다. 거북이 형상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작품 '거북'이 울산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수년 전부터 소장기인 제미 사립가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인데 지난 1월 6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1호가 됐다. 자연과 기술, 산업

백남준이 울산으로 간 까닭은

과 예술의 조화를 내건 울산시립미술관의 비전이 소장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구입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미술관 소장품과 전시 일정을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 시장으로서의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울산은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광역시이지만, 공립미술관은커녕 변변한 사립미술관 하나 없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전시를 보기 위해 부산이나 대구 등으로 원정 관람을 떠나야 했다. 그레 울산은 주머니는 부자여도 마음은 삭막한 '문화 불모지'라는 불명예까지 안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술관 건립이 공론화된 이후 원도심에 시립미술관 분관(울산 중구 도서관길 72)과 분관이 개관하면서 지역민들은 가슴 한편에 묻어 둔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씻어 낼 수 있게 됐다. 개관과 동시에 평일 1000여 명, 주말 3000여 명이 다녀가며 폭발적인 호응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 두 달 만에 5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은 데에는 차별화된 컬렉션이 있었다. 공업도시의 정체성에 맞게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한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소장품 기금제'를 도입했다. 그리하여 개관 이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140억 원을 적립했다. 대부분의 국공립미술관이 한해 5~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1년 단위 회계연도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적립된 재원 내에서 작품을 구입하고 남은 기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유연한 방식 덕분에 울산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백남준의 '거북'을 비롯해 '시스티나 채플',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등 3점을 소장할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아트의 거장 페터 바이벨, 중국 작가 송동, 한국의 이

불·문경원·전준호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 29점도 손에 넣었다. 여기에 '아시아 최고의 컬렉션'을 지향하는 미술관의 로드맵에 맞춰 매년 지속적으로 '문제작'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30주년 맞은 GMA의 미래는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GMA: Gwangju Museum of Art)이 개관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1992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탄생한 GMA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문화광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전국의 미술애호가들을 광주로 '불러들이는' 파급력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일교포 하정웅 씨가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과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외연이 풍성해지긴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GMA를 상징하는 걸작들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평화·인권'을 내걸고 매년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7억 원에 불과한 빠른 예산으로는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작은 '그림의 딱'일 뿐이다. 게다가 주어진 예산을 쪼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나눠주기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립미술관이 처음 시행한 '소장품 기금제'는 문화수도를 자부하는 광주시가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미술관의 컬렉션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GMA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만의 컬렉션을 가꿔 가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의 과감한 지원과 열린 마인드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쟁력 있는 컬렉션은 도시의 관광 자산이자 브랜드이다.

은폐칼럼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흥길동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역적'에 나오는 안에는 가수의 '봄이 온다면' 첫 대목이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봄이 오니 신비롭게도 생명들이 솟아오른다. 변함없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올 봄에도 도시 농부들은 감자를 심고,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을 것이다. 또 풀을 주고, 풀을 뽑아 주면서 몇 달을 기다리면 맛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현대 도시인들이 아파트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웃과 교류도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텃밭이라도 있어 농사를 지으면 서로 농사짓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농사

도시농업 진흥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자

지는 먹거리로 함께 상추쌈에 삼겹살 파티라도 하면 서로 더 애뜻해진다. 인간은 지난 4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는데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경작의 본능을 잃어 버렸다. 다시금 몇 평의 땅이라도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살아 있던 농사의 DNA가 살아나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대도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들 중 적절한 부지를 골라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농업에 필요한 필수 시설인 화장실, 세면장, 물탱크, 농기구 보관소, 휴게 공간, 교육장, 주차장 등을 갖춘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도 농촌 통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이런 땅들은 도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는데, 농약과 비료를 주며 농사를 짓는 관행농업에만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현재 공영 부지를 농장으로 만든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필수 필요 시설을 갖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부지는 수요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영 도시농업 농장'도 관련 시설을 갖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데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민간 영역에서 도시농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

하여 '도시농업 진흥지역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도시농업을 하기에 적절한 부지와 구역을 선정,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필수 필요 시설을 갖추고,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법안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대도시 내 개발제한구역들이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개발되면 시민들은 건강한 힐링 여가 공간은 물론 친환경 먹거리를 구할 수 있고, 대도시 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류를 촉진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또 관행농업보다는 생태농업이 환경보호 효과도 커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호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 도시의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직장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팀을 이루어 도시농업 진흥지역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운동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으로 연결이 되어 결국에는 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환경·일자리 등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다.

기고



이영석  
전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보이고 있다. '안전한 국가'가 나라의 목표가 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명 '민식이법' 제정(2020년 3월 25일 시행) 및 중대재해특별법(2022년 1월 25일 시행) 제정이 그것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무사고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여야 한다. 호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자 일주일일 넘도록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가치이다.

제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그 정착에는 협력과 타협의 과정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현장을 둘러보고,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불행뿐만이 아니라 후진국형 도시 계획과 건축 문화 및 행태에서 비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아보고

롯된 것을 알게 되었다. 선거 때만 되면 유행가 가사의 한 대목인 양 흘러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비롯해 현장 상황에 무관심한 탁상행정, 건축주의 요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건축가의 설득력, 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공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인과 민간투자자, 내 집에는 투자 없이 공공에만 바라는 '죄수의 변신'에 중독된 주민 의식, 자전거를 이용한 쇼핑과 통학이 '금지된 장소'가 되어버린 무사안일한 교육 및 교통 행정이 학교를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도시 재생 오페스트라의 교향곡으로 듣고 싶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거주자와 상인은 주차차 금지된 학교 주변에서 생활과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상가는 매출이 급감하고 주택과 사무실은 공실이 발생하는데, 입법 및 관련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가 장벽에 부딪혔다는 내용이다. 그들의 요구는 일부 구간 주차차 금지구역 완화, 단속 시간 및 공휴일 단속 유예, 공공주차장 확보 등이다. 학교를 사방으로 둘러싼 노후 주거지엔 지금까지 집 앞 도로가 주차장이었고, 신규 건립된 중규모 복합 상가도 화물차량용 상하차 공간이 없어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건축문화는 주차장에 인색했고 그 결과 온 마을이 주차장이 된 셈이다. 스쿨존은 차량의 속도와 주차장의 문제이다. 스쿨존의 유효성 있는 운영과 지상 주차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 과밀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착시키려면 도시 재생이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스쿨존을 교통문화로 보면,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결과적으로 학교 주변 도로를 학교와 교육청에 전부 기부한 셈이다. 받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의 전 구역이 될 필요도 없다. 좁은 주택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고, 주간엔 학생들의 보행로로, 야간엔 주차 공간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별도 유도색으로 구분 포장을 하여 사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감시 카메라와 함께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의 이중 설치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도시에서 주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문화 선진화의 상징이며 안전한 민주국가로 가는 교육장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통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주민들의 안전 봉사, 학교의 열린 마음, 도시와 교통 행정의 협력과 지원, 도로 이용자의 안전 의식이 키워낸 열매이다. 한 차선을 막아선 불법 차량은 골목길 소화전 앞에 세워둔 차량과 같다. 학교 주변부터 차고 증명제 수준의 도시 계획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한 어린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社說

원로들의 '연합정부' 제안 경청할 만하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최근 양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단일화 무산을 놓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그 래서인지 대선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누가 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정치·시민사회 원로들이 어제 대선 후보들에게 연합정부 구성과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원로 20명이 참여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TV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각 후보들에게 20대 대통령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 총리를 비롯한 초당적 내각 구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 통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연합정부를 제안한 것은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했던 다른 정당 및 그 후보들과 협력해야 우리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여겨진다. 국민통합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은 의석수가 적으니까 말할 것도 없으며, 180석이나 가진 민주당 역시 다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다가는 다가올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각 당은 원로들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공동선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파산·폐업 속출 해결책 내놓는 후보 없나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과 폐업 및 파산이 속출하면서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복지 위기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만 1548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1만 8791명이 늘었다. 3년간 무려 25%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 지역도 지난 2018년 8만 4819명에서 2000년에는 9만 2666명으로 9.3% 늘었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차상위 계층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는 것은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광주가 13%, 전남은 11.4에 달했다. 더욱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경우 손실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자영업자 등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2239건)도 전년(20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취약 계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선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 가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질서를 '신냉전' 구도로 몰아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 억지력'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전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빗어낸 마소 냉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꼽고 있다.

신냉전

'냉전'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제 정치적 대립 관계를 일컫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소 동맹관계가 해체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공산정권 사이에 냉전 구도가 발생하면서 외교가에서 써 온 용어다. 그러나 1990년 독일 통일과 이듬해 소련의 해체 및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간 냉전시대의 막은 내렸다. 이처럼 '탈냉전' 시대를 맞아 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경제·외교적 관계를 강

화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를 친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소련'에 대한 향수가 강한 푸틴 대통령이 20여 년을 집권하면서 유럽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고개를 뚫고 있는 러시아-중국과 미국-유럽들의 서방 국가로 확대되는 '신냉전'으로 이어지면서 평화가 우선으로 꼽혔던 세계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이미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시작됐다. 서로 하늘길을 닫으면서 유럽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경제적·문화적 불편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만큼 평화적인 해결로 끝났으면 한다. 물론 전쟁 등의 분쟁은 당사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국제사회도 함께 나서서 이번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